

금융투자업규정

<목 차>

1.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
2.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현지은
	담당부서 (과)	자산운용과		직급	사무관
	국장	이윤수		연락처	02-2100-2668
	과장	고상범		이메일	2080751@mail.g o.kr

2021. 07. 14.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									
	2.규제조문	제7-1 조의2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시행령 제209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7.16 ~ 2021.08.2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신뢰 확보를 위해 투자자·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을 자기 공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함									
	7.규제내용	신규 공모펀드를 등록할 경우, 운용사 등의 고유재산을 2억원, 3년 이상 투자하도록 의무화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div>공모 자산운용사</div>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공모 자산운용사</td><td>75개사</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공모 자산운용사	75개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공모 자산운용사	75개사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신뢰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 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7-1조의2(집합투자기구 등록시 고유재산 투자 요건) ① 영 제209조 제1호가목,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p> <p>1.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금(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출자금,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납입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억원 이상일 것. 다만,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이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고유재산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p> <p>2. 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을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출자·납입일에 전부 출자·납입할 것.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규모가 1조원 이하이면서 등록을 신청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한이 5년 이상</p>

현 행	개 정 안
	<p><u>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한 날부터 1년 동안 4회 이하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u></p> <p><u>3. 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을 집합투자 설정·설립 후 3년 이상 유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존속기한이 3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고유재산 투자금을 존속기한 동안 유지하는 경우</u></p> <p><u>나.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내에 법 제192조제1항 단서, 같은 조제2항, 제202조제1항 또는 제221조제1항에 따라 해지·해산하는 경우</u></p> <p><u>다.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내에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편입되거나 영 제245조제5항에 따라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경우</u></p> <p><u>라.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된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금을</u></p>

현 행	개 정 안
	<p><u>출자·납입하여</u> <u>집합투자기구</u> <u>설정·설립 후 3년 이상 유지하</u> <u>는 경우</u></p> <p>4. 제3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u>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금</u> <u>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u> <u>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u> 가. 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이 경 <u>과하기 1개월 이전에 고유재</u> <u>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u> <u>사실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u> <u>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u> <u>이용하여 공시할 것</u> 나.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회수 <u>할 것. 다만, 고유재산 투자금</u> <u>이 집합투자기구 원본액의 10</u> <u>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u> <u>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u> <u>다.</u> 다. 1회에 회수하는 금액은 고유 <u>재산 투자금의 100분의 50 이</u> <u>하로 하고, 1개월 이상이 경과</u> <u>한 후 다음 회차의 투자금을</u> <u>회수할 것</u> 라. 회수결과를 자산운용보고서 <u>에 기재하고 자산운용사 홈페</u> <u>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u></p> <p>5. 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p>

현 행	개 정 안
	<p><u>의 출자·납입과 제4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의 회수는 집합투자업자의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승인을 거칠 것</u></p>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금을 출자·납입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집합투자기구</u> <u>2.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u> <u>3. 법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u> <u>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u> <u>5.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u> <u>6.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u> <u>7.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u>

현 행	개 정 안
	<p><u>는 집합투자기구</u></p> <p>8. <u>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전부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 위탁한 집합투자기구</u></p> <p>9. <u>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개인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u></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신뢰 확보를 위해 투자자와 운용사 간 펀드 성과 공유 필요

○ 공모펀드에 대해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를 의무화하는 행정지도 시행('17.5.10. 시행, 4회 연장)

□ 규제의 명확화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의 법규화를 추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
	내용	법규에 반영하여 공모 운용사가 자기 공모펀드에 3년간 2억원 이상 투자하도록 의무화
규제대안2	대안명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유지
	내용	행정지도를 통해 공모 운용사가 자기 공모펀드에 3년간 2억원 이상 투자하도록 감독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운용사와 투자자의 이해를 일치시켜 운용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규에 따라 명확하게 규제	미이행시 펀드 등록 불가
규제대안2	공모 자산운용사의 협조를 바탕으로 자기투자 유도	그림자규제 존속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공모 자산운용사	공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행정예고안에 반영

	(21.1.26. 금융위 자본국장 주재 시장간담회 등)	
투자자 등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예정(21.7.16~8.25)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운용 책임성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대안1이 바람직
 - 투자자와 운용사가 펀드 성과를 공유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필요
 - 행정지도를 통한 그림자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규제시 운용사가 사모펀드 위주로 운용업무를 수행할 우려

3. 규제목표

- ☐ 공모펀드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동 규제는 운용사의 공모펀드 운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미 성과공유 체계가 마련된 펀드, 운용사의 운용능력과 펀드 성과 간 상관관계가 낮은 펀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 또한, 펀드 설정 초기 3년간만 자기투자를 의무화 하고 소규모 운용사의 분할납입을 허용해 공모 운용사의 실질적인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고 있어 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규제대상 집단에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음(모두 공모 자산운용사)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모든 공모 운용사가 신규 공모펀드를 등록할 때 동일하게 적용받는 규제
이므로 시장 진입 등을 제한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공모펀드의 등록요건은 일관되게 규제할 필요가 있어 일몰설정 부적절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규제대상은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피규제자의 이행 가능
유연한 분류 체계		자기 공모펀드 투자 규제대상은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피규제자의 이행 가능

네거티브 리스트		이미 성과공유 체계가 마련되었거나 운용에 따라 펀드성과가 크게 영향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공모펀드 신규 등록시 적용 필요
사후 평가관리		펀드 성과에 대한 일괄적인 사후 평가 곤란
규제 샌드박스		공모펀드 등록의 기본 요건으로 규제특례부여 곤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3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 중인 사항을 법령화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규제의 신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모 운용사의 규제 준수에 어려움은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이미 시행 중인 규제로 공모펀드 등록시 자기 공모펀드 투자 이행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므로 규제 집행에 어려움은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4년간 기존 행정지도를 운영하며 연장시마다 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친 사항

2. 향후 평가계획

- 제도 운영과정에서 규정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금감원·업계 등과 협의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

3. 종합결론

-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는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책임성 확보 및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 투자자 신뢰 회복에 따른 공모펀드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하면 피규제자의 비용보다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3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세분류	공모 자산운용사
활동제목	자기 공모펀드 투자
비용항목	자기 공모펀드 투자로 인한 기회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 자기 공모펀드의 운용성과가 부진한 경우, 안정적인 국고채 등에 운용한 경우 보다 공모 자산운용사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p> <p>○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공모 자산운용사가 자기 공모펀드 투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신규 공모펀드를 등록하지 못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있으나,</p> <p>- 75개 공모 운용사의 '21.1분기 당기순이익이 약 4천억원에 달하는 점 감안시 자기 공모펀드 투자 규제로 인해 신규 공모펀드를 등록하지 못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으로 판단</p>

②피규제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공모펀드 투자자
활동제목	펀드성과
편익항목	책임운용으로 인한 펀드성과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 공모운용사도 펀드의 투자자가 됨에 따라 책임운용을 하게 되어 펀드성과가 제고되고 공모펀드 투자자의 편익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p>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									
	2.규제조문	제 7-1 조의3, 제 7-4조, 제 7-8조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시행령 제209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7.16 ~ 2021.08.2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p>소규모펀드 난립에 따라 펀드 관리효율 저하, 포트폴리오 구성 곤란 등 문제가 발생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선택도 저해</p> <p>■(정상적인 운용곤란)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곤란하여 투자목적에 따른 자산운용과 효율적인 분산투자가 곤란</p> <p>■(수익률관리 소홀) 펀드매니저별 펀드수 과다로 펀드수익률 관리 소홀 우려</p> <p>■(경영비효율 초래) 고정비용은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펀드운용의 비효율성 발생 및 수익률 저하 가능성</p>									
	7.규제내용	소규모펀드 비율 5%를 미충족한 운용사는 추가형 공모펀드 신규등록 제한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p>공모 자산운용사</p>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공모 자산운용사</td><td>75</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공모 자산운용사	75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공모 자산운용사	75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소규모펀드 비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공모펀드 투자자를 보호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7-1조의3(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 요건) ① 영 제209조제1호나목에 따른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같은 조 제2호라목, 제3호다목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의 경우에도 같다)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하며, 이하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설정·설립되고 1년이 지난 집합투자기구의 수 중 영 제9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의 비율을 말한다.</p> <p>2. 제1호에 따른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수 및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이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산정</p>

현 행	개 정 안
	<p><u>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하나의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해당 투자 대상 외국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u></p> <p><u>3. 제1호에 따른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수 및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u> <u>다만, 라목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를 산정할 때에만 제외하며, 마목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만 제외한다.</u></p> <p><u>가. 부도 또는 소송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운 자산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u></p> <p><u>나.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정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조제1항에 따</u></p>

현 행	개 정 안
	<p><u>른 개인연금저축에 해당하는</u> <u>집합투자기구</u></p> <p><u>다. 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u> <u>조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u> <u>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입</u> <u>기간이 경과한 (제2호의 집합</u> <u>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집합투</u> <u>자기구로서 집합투자업자가</u> <u>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u> <u>중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u> <u>등이 유사한 것이 없어 모집합</u> <u>투자기구 이전 등이 불가능한</u> <u>집합투자기구</u></p> <p><u>라. 영 제225조의2제2항 또는 제</u> <u>7-25조제6항제4호에 따른 통</u> <u>지를 한 집합투자기구</u></p> <p><u>마. 제4-54조의2 각 호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u> <u>구</u></p> <p><u>② 영 제209조제1호나목, 같은 조</u> <u>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호다목에</u> <u>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u> <u>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u>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p> <p><u>1.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가 소</u> <u>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u> <u>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u> <u>기구인 경우</u></p>

현 행	개 정 안
제7-4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영 제211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p>2. <u>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종류형투자기구의 새로운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인 경우</u></p> <p>3. <u>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2개 이하인 경우</u></p> <p>4. <u>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때 출자·납입되는 금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한 경우(이 경우 투자계획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5. <u>제4-5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u></p>
1. ~ 3. (생략) <신설>	제7-4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 ----- -----.
제7-8조(집합투자계약의 기재사항) 영 제215조제12호, 제227조제1항제13호, 제234조제1항제12호, 제236조제1항제12호, 제236조의2제1항제12호, 제237조제1항제11호 및 제239조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p><u>투자업자의 소규모 집합투자구 비율에 관한 서류</u></p> <p>제7-8조(집합투자계약의 기재사항) ----- ----- -----</p>

현 행	개 정 안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u>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제7-1조의3제1항제3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7-1조의3제1항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을 제외한다.</u>
	<u>가.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대표 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된다는 사항</u>
	<u>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항</u>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소규모펀드 난립에 따라 펀드 관리효율 저하, 포트폴리오 구성 곤란 등 문제가 발생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선택도 저해

○ '16.2월부터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금융위 행정지도) 시행

□ 규제의 명확화를 위해 동 행정지도의 법규화를 추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
	내용	소규모펀드 비율 5% 미충족시 신규 공모추가형 펀드의 등록을 제한
규제대안2	대안명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유지
	내용	행정지도를 통해 소규모펀드 비율 5% 미충족시 신규 공모추가형 펀드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도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소규모펀드 억제 규제 명확화	소규모펀드 비율 5% 미충족시 신규 펀드 등록 불가
규제대안2	자산운용사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소규모펀드 억제를 유도	그림자 규제 존속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자산운용사	공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21.1.26. 금융위 자본국장 주재 시장간담회 등)	제도개선안에 반영
투자자 등	금융투자업규정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 (‘21.7.16~8.25)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운용사의 소규모펀드 정리를 활성화하고,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안1이 바람직
 - 소규모펀드는 정상적인 운용이 곤란하고, 수익률 관리, 경영비효율 등의 문제점 문제점을 초래
 - 궁극적으로는 투자자 이익 감소 가능성을 높이며, 소규모펀드 난립시 투자자의 투자판단 저해도 우려
 -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의 필요성이 크므로, 행정지도를 법규화하여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피규제자 입장에서 바람직

3. 규제목표

- 소규모펀드의 실효성 있는 정리 활성화 및 발생 억제를 통해 펀드운용의 효율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소규모펀드를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소규모펀드의 발생을 억제하여 펀드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 소규모펀드 관리에 부적절한 단위형 공모펀드와 운용책임 확보를 위한 장치가 마련된 펀드 등은 소규모펀드 비율에 관계없이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규제부담을 적절한 수준으로 완화
 - 소규모펀드 난립 억제 수단은 신규 공모펀드의 무분별한 등록을 차

단하는 것 뿐이므로 목적과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규제대상 집단이 공모 자산운용사로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모든 공모 운용사의 공모펀드 설정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로 경쟁 제한적이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일몰설정시 소규모펀드가 급증할 필요 있어 일몰설정 부적절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0	소규모펀드 비율 현황 등을 제출받아 성과관리할 예정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 준 법규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 중인 사항을 법령화하는 것으로써 실질적인 규제 신설이 아니므로, 규제 준수에 대한 어려움은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이미 시행 중인 규제로 신규 공모펀드 등록시 소규모펀드 비율을 확인하면 되므로 규제 집행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 '16.2월부터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에 위한 모범 기준」(금융위 행정지도) 시행하여온 사항으로, 매년 행정지도 연장시 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특이사항 없음

2. 향후 평가계획

- ☐ 공모펀드 소규모펀드 비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

3. 종합결론

- ☐ 행정지도 시행 결과 소규모펀드 비율 관리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규제로, 명시적 규제로 전환하여 지속 적용할 필요

※ '11.6월부터 소규모펀드 해소를 추진해왔으나, 행정지도 시행 전까지 소규모 펀드 비중은 30%이상으로 유지 → 행정지도 시행 후 10% 미만으로 급감

* ('10년) 48.2% → ('11년) 39.8% → ('12년) 36.9% → ('13년) 35.8% → ('14년) 36.2% → ('15.6월) 36.3% → ('16.2.5일 모범기준 시행) → ('16말) 7.2% → ('18.12월) 5.9% → ('20.12월) 6.8%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비용

(정성)세분류	공모 자산운용사
활동제목	펀드 등록 제한
비용항목	소규모펀드 비율 초과로 인한 펀드 등록 제한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p>○소규모펀드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자산운용사는 신규 공모추가형 펀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p> <p>○이 경우 자본시장법령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소규모펀드 정리 방안(예: 모자형펀드에 합병 허용, 펀드 해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소규모펀드 정리 가능</p> <p>– 또는, 운용사의 책임운용이 확보된 펀드(예: 성과보수를 받는 펀드, 시딩투자를 자기자본의 1%이상 한 펀드)는 소규모펀드 비율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p> <p>○따라서, 동 규제로 인해 공모 자산운용사가 신규 공모펀드를 등록하지 못하여 신상품 출시가 제한되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p>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공모펀드 투자자
활동제목	공모펀드 투자
편익항목	운용사의 충실한 펀드 운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동 규제를 통해 공모펀드가 설정 후 관리되지 않아 소규모펀드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장기적으로 충실히 운용 및 관리하도록 하여,</p> <p>– 공모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성과 제고 등의 편익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p>

